
충남 일자리 현황 및 변화 전망

2022. 6. 30.

박상철
지역고용네트워크

I 충남 일자리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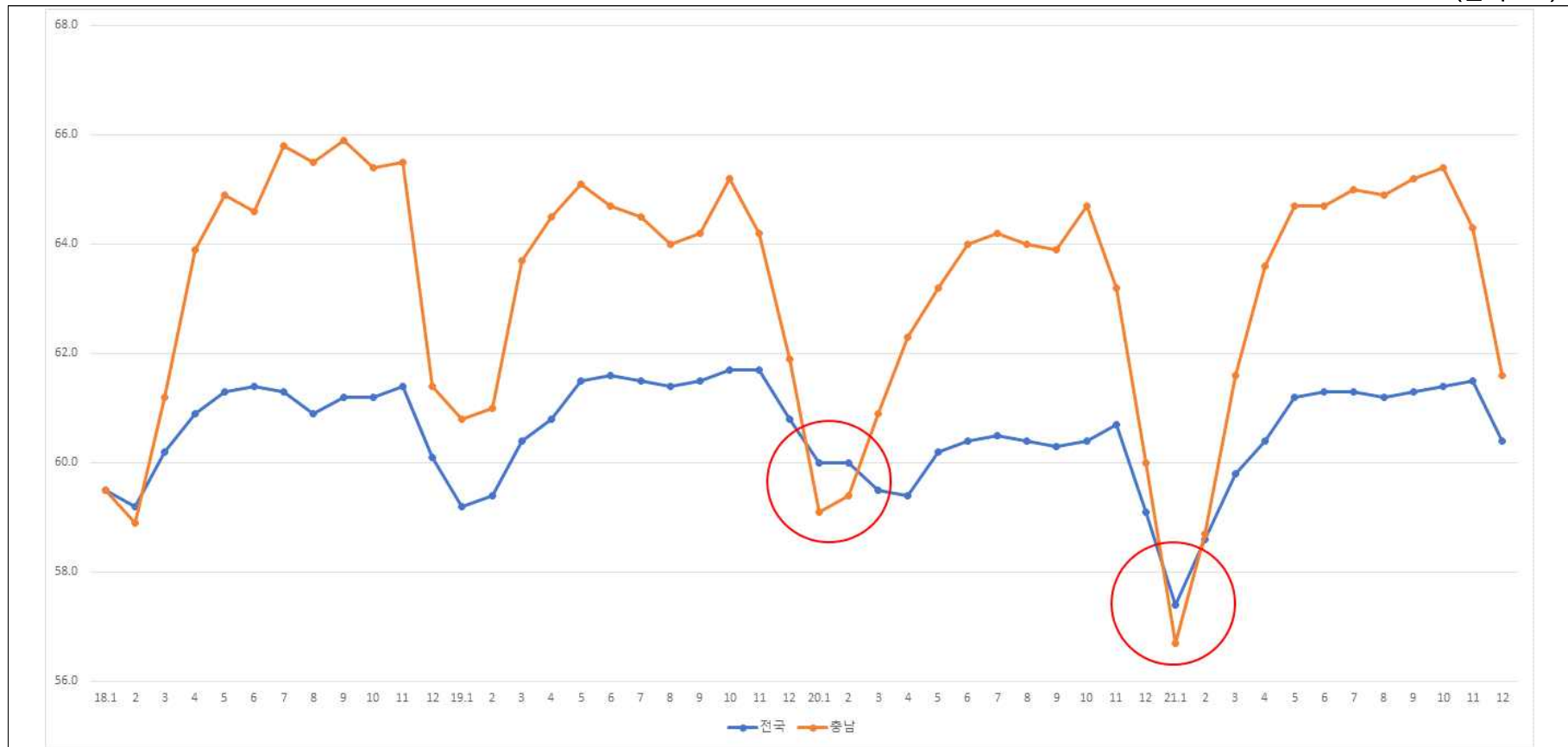
- 민선8기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고, 민선8기 일자리 변화 전망과 대응에 숙의가 필요

1. 고용동향 추이

- 최근 4년간('18년~'21년) 분기별 충남 고용률은 전국 고용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 - 코로나19가 시작되던 '20년 고용률이 감소하였지만, '21년에 다시 고용률을 회복함
 - 충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특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코로나 이후 회복력도 빨랐던 것으로 보임
 - 다만, 코로나19 이후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고용률 V계곡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, 일자리 가뭄기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짐

<그림 1> 충남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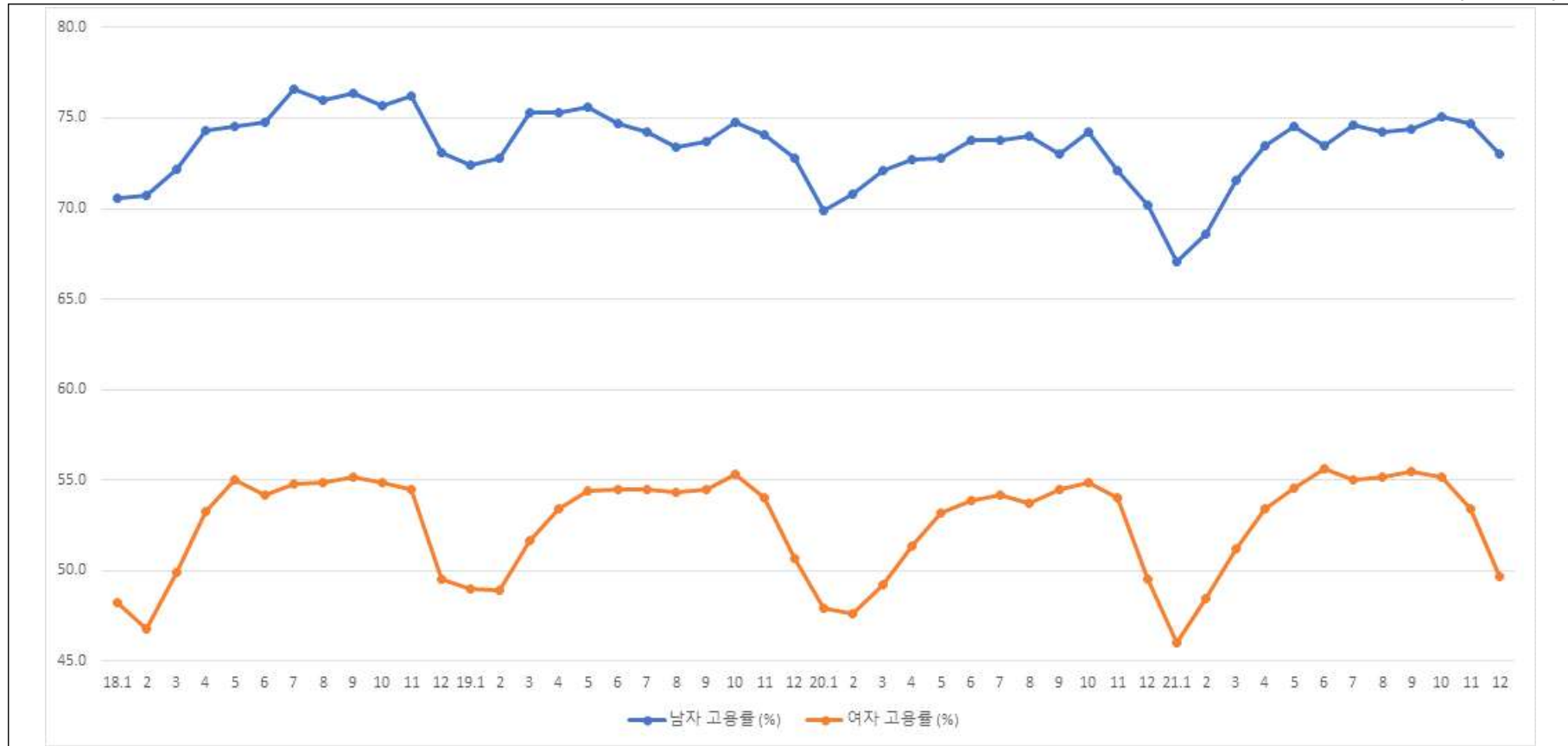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- 최근 4년의 분기별 충남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,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'2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의 고용률을 보였으나, '21년 다시 회복세를 보임
 - 코로나19로 '20년 남성 고용률은 감소되는 되는 반면, 여성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
 - 이는 코로나19가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남성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, 여성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, 농업일자리 등의 확대로 완충적 일자리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보임
 - 다만 남성과 여성 모두 계절적 요인의 의한 고용률 V계곡이 더욱 깊어지는 경향을 보여줌

<그림 2> 충남의 성별 고용률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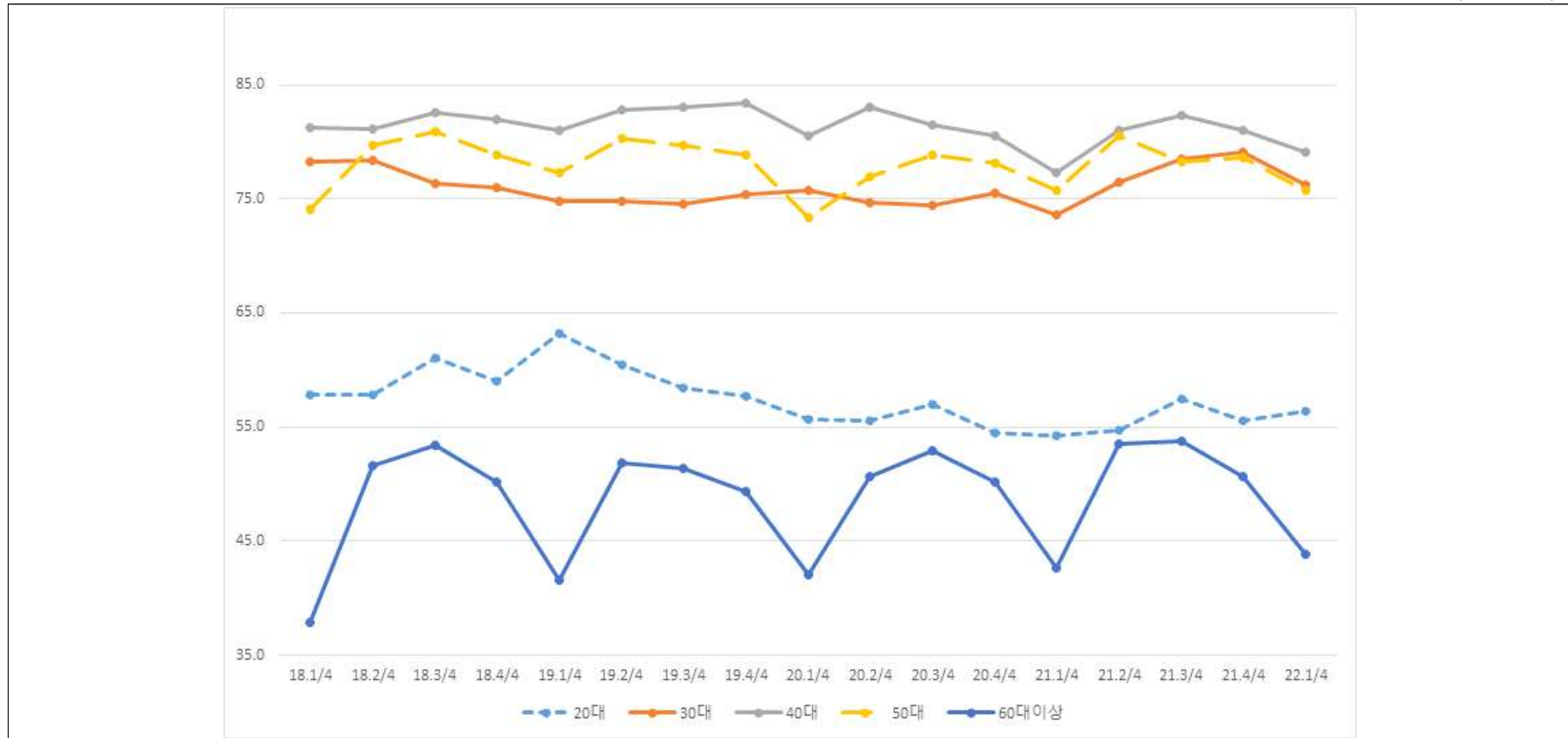
■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,

- 20대 고용률은 '19년 1사분기 이래로 감소하다, '21년 2사분기부터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줌
- 30대 고용률은 '18년 1사분기부터 감소하여 정체되다, '21년 1사분기를 기점으로 개선되었음
- 40대 고용률은 '20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다, '21년부터 회복되는 경향이 있음
- 50대 고용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등락폭이 명확하며,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률이 유지하였음
-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고용률 등락이 명확한데, 주로 농림어업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임

→ 전반적으로 최근 4년에 걸쳐 30대~40대 고용률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, 청년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

<그림 3> 충남의 성별 고용률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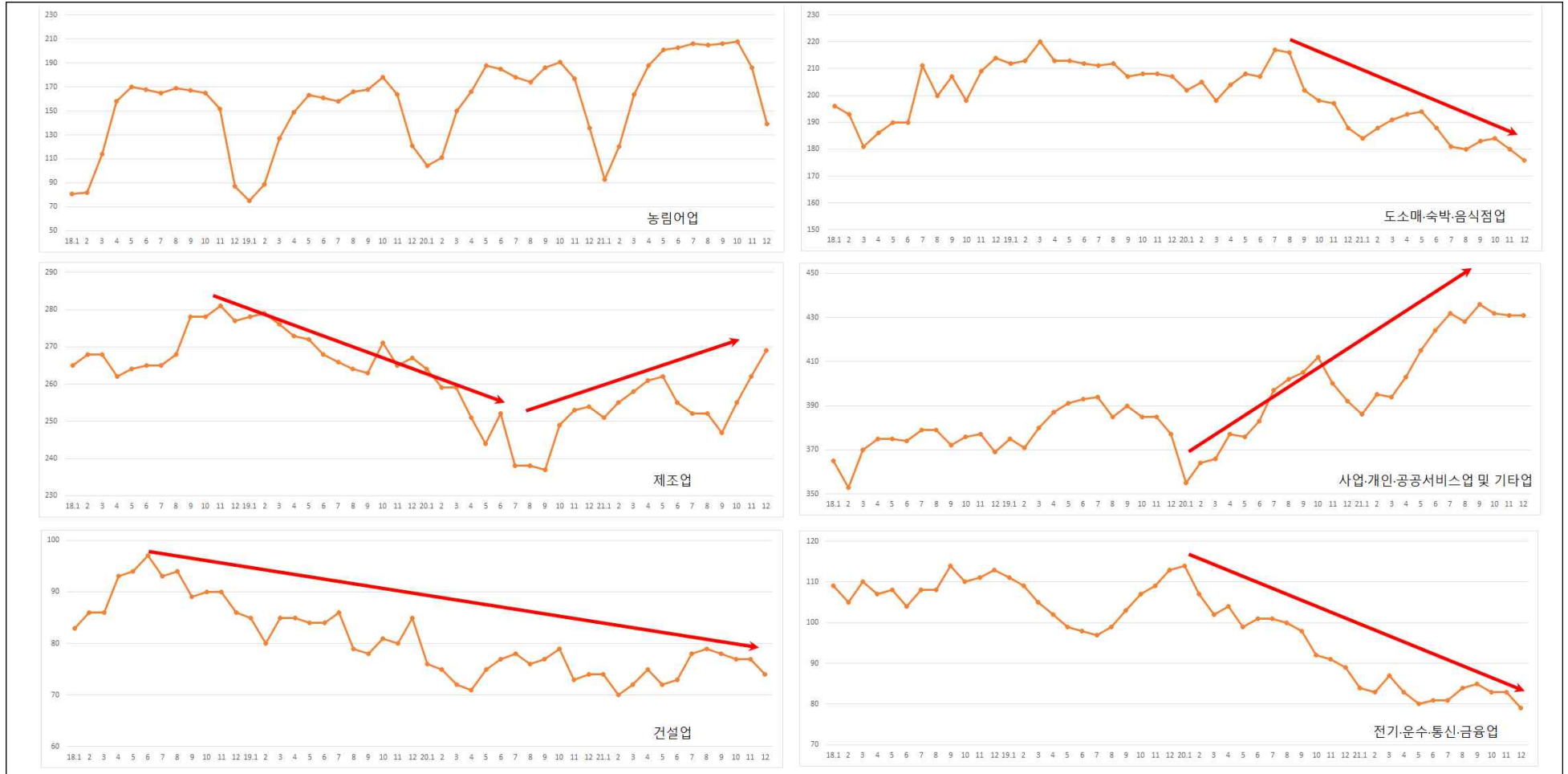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■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,

- 농림어업은 월별 등락은 있으나 매년 전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
 - 제조업은 '18년 11월을 정점으로 '20년 9월까지 감소하다, 이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
 - 건설업은 '18년 6월을 정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 정체 상태에 있는데,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 대규모 건설공사가 수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
 -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은 '20년 7월 정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
 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업의 취업자는 '20년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는데,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임
 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은 '20년 2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
- 최근의 충남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의 회복,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의한 공공서비스업 일자리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

<그림 4> 충남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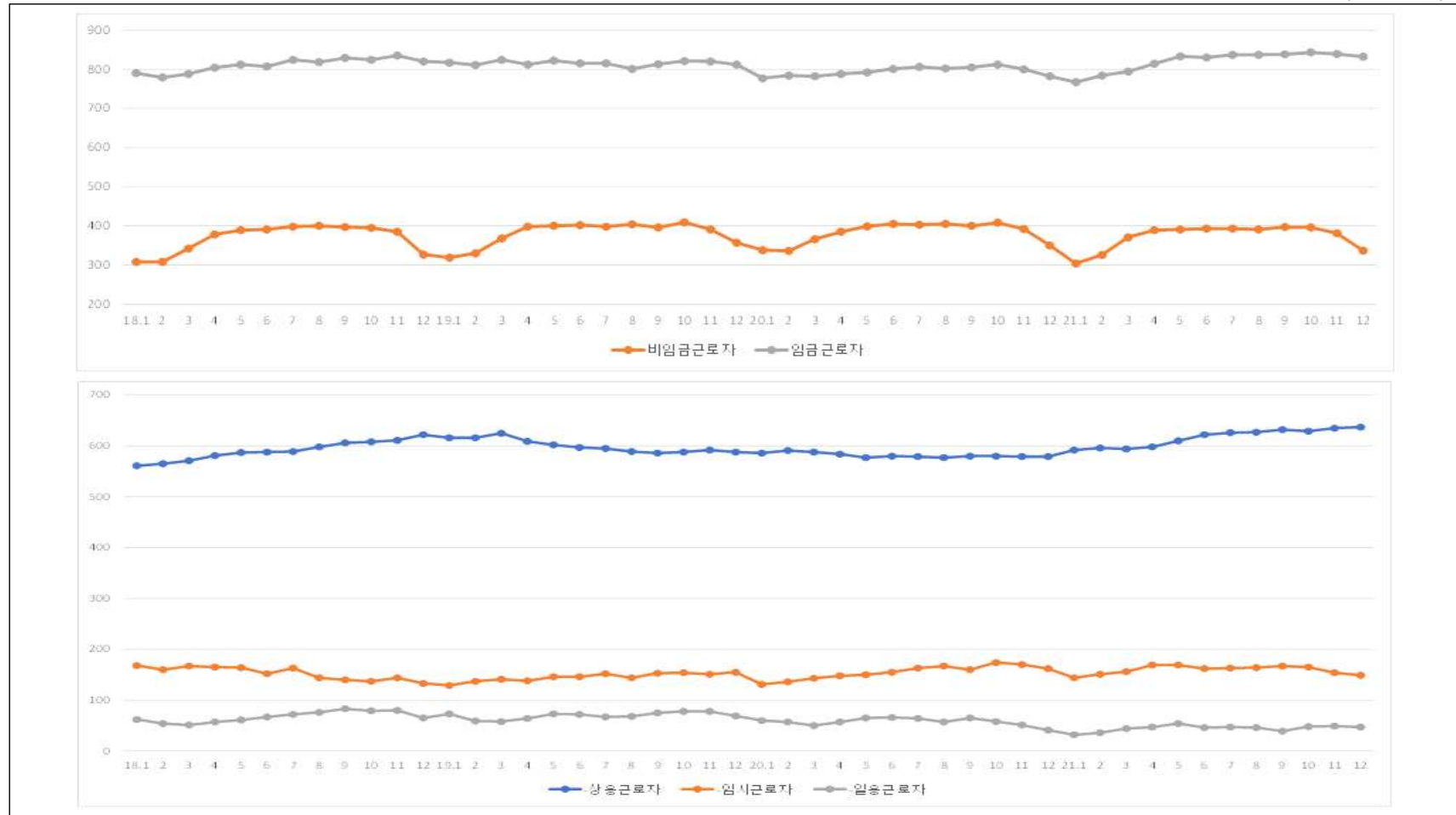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■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,

- 충남의 산업구조 특성 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비임금근로자는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,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. 즉,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가 감소되기 보다는 유지되었음
-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, 높은 상용근로자 비중, 낮은 임시일용근로자 비중 경향이 유지되었음. '21년 1월부터 상용근로자 취업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,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괜찮은 제조업 일자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임

<그림 5> 충남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2. 고용보험 추이

- 최근 4년간('18년~'21년) 충남 피보험자 추이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등락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
<그림 6> 충남의 피보험자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(EIS)」, 각 월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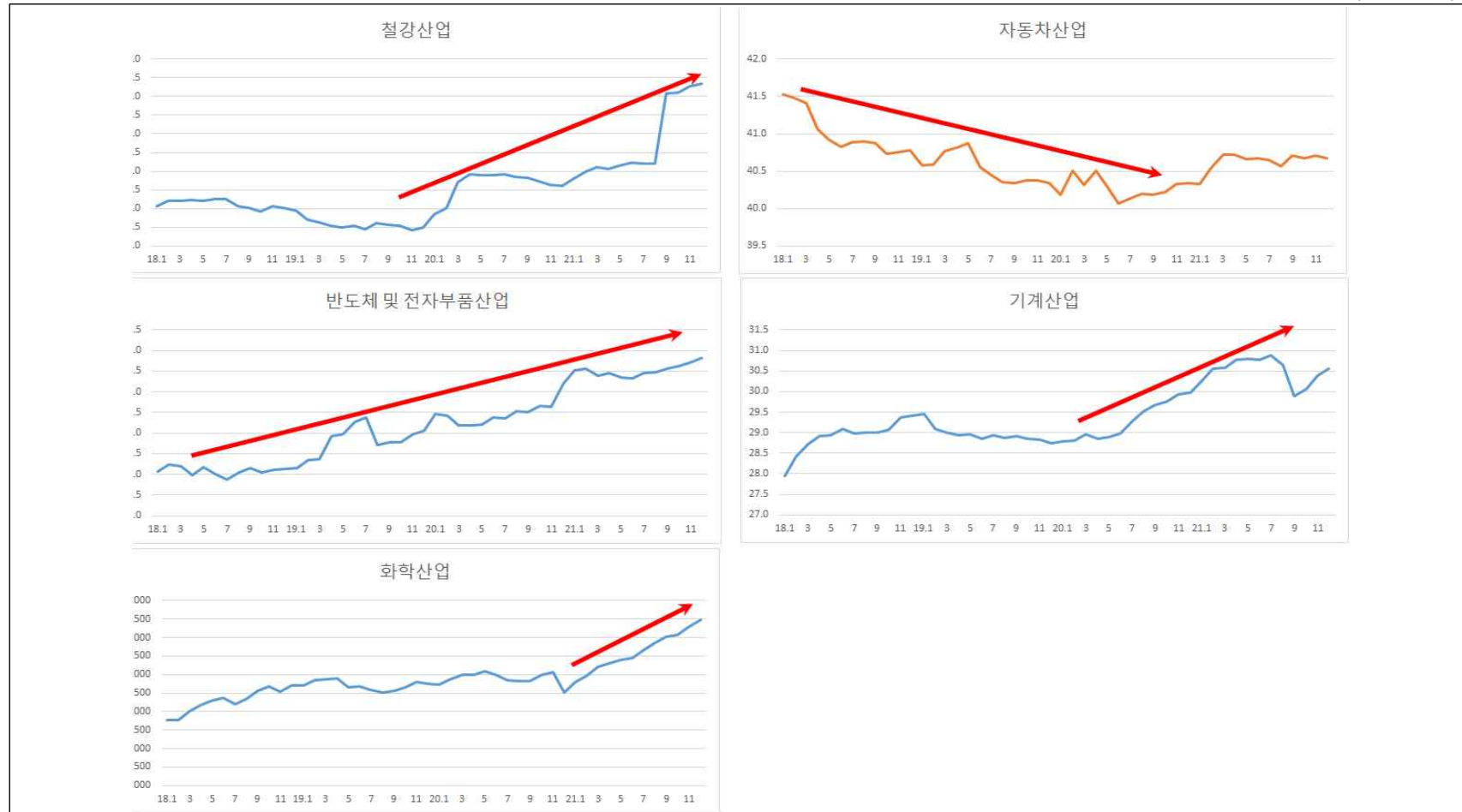
■ 충남 주력산업 피보험자 추이를 살펴보면,

- 철강산업은 '20년 1월부터 단계적 패턴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
- 자동차산업은 피보험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'20년 6월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
- 반도체 및 전자부품산업은 '18년 1월 이래로 지속적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어, 충남 제조업 일자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기계산업은 '20년 5월 기점으로 피보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, '21년 말에 들어오면서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
- 화학제품산업 역시 '2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피보험자 증가하고 있음

→ 결국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충남 주력산업의 안정적 일자리로 유지로 큰 충격 없이 일자리 위기를 빚겨 갈 수 있었음

<그림 7> 충남의 제조업 주력산업별 피보험자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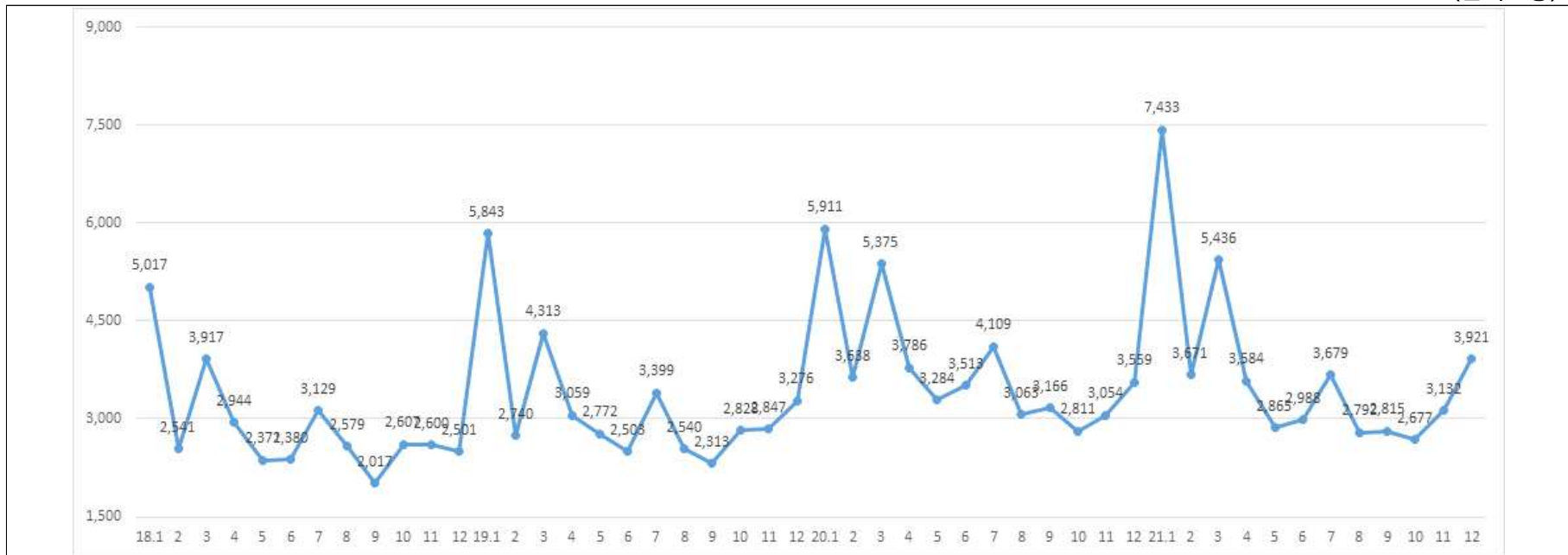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(EIS)」, 각 월별

3. 실업급여신청 동향

- 계절적 요인에 의해 실업급여신청 건수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. 다만 코로나19 시기에 신청 건수가 다소 높은 경향은 있음.

<그림 8> 충남의 실업급여 신청인원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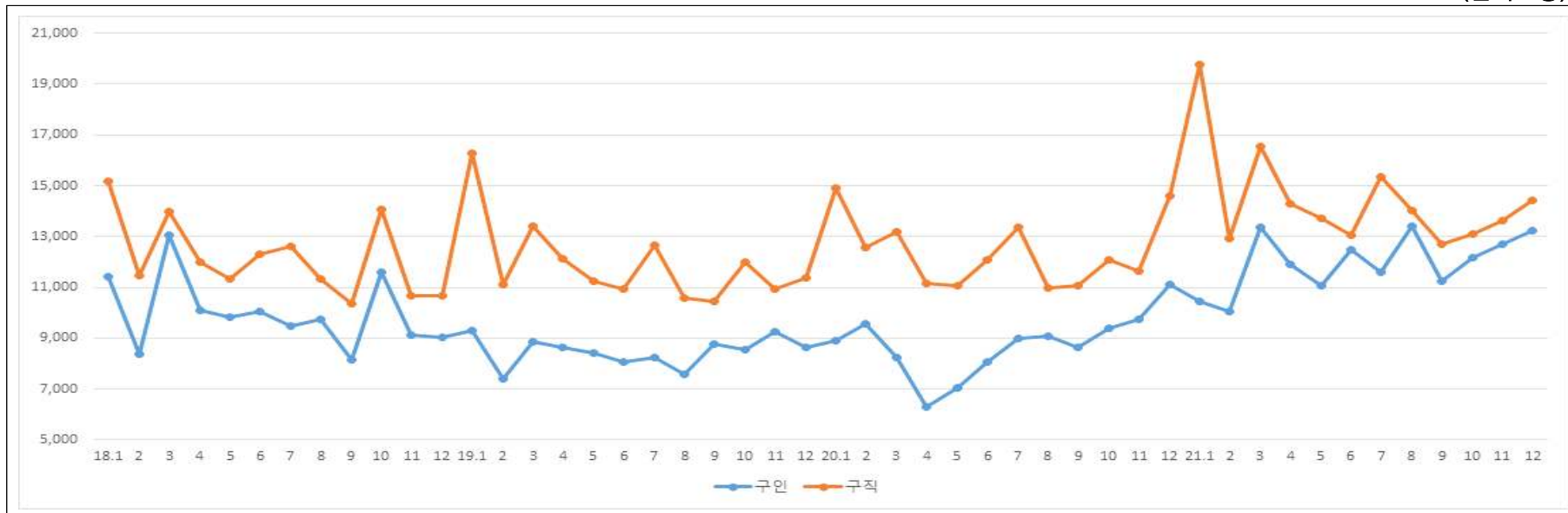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(EIS)」, 각 월별

3. 구인구직 추이

- 충남의 구인구직 추이를 보면, 구인보다는 구직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. '19년~'20년 사이에 구인인원과 구직인원의 차이가 확대되었지만 '21년에는 그 차이가 많이 감소함

<그림 9> 충남의 구인구직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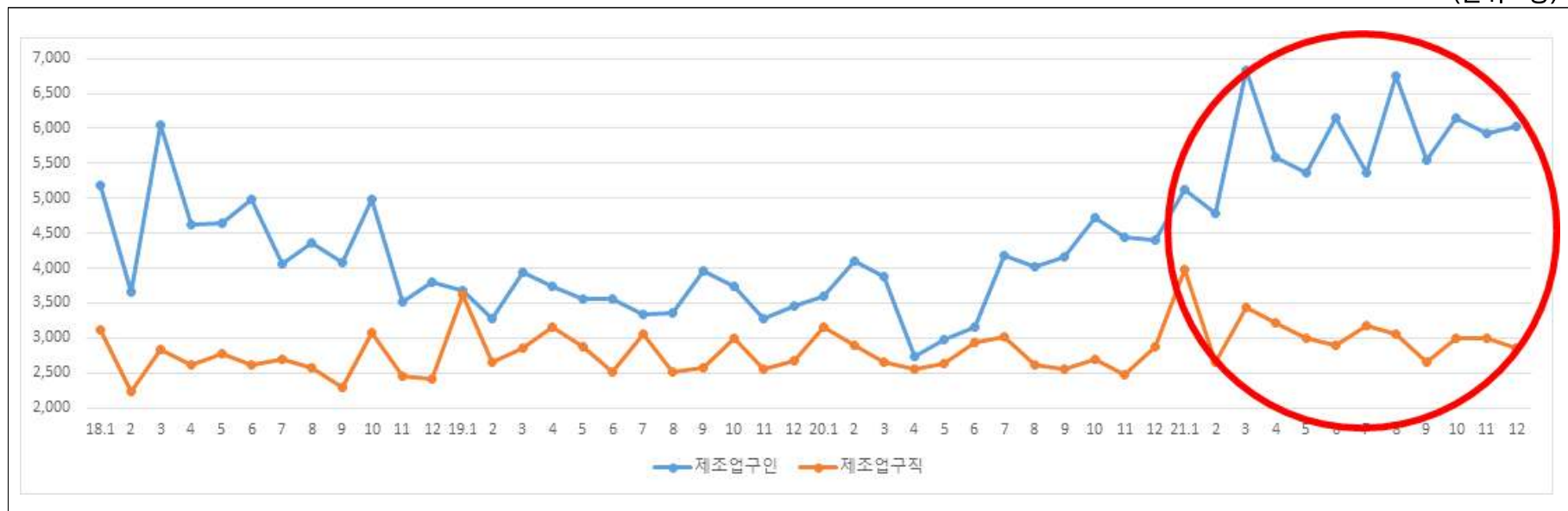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「고용행정통계(EIS)」, 각 월별

- 제조업 구인구직을 보면 구인인원보다 구직인원이 적어 구인난 상황에 있음. 특히 '21년 들어 구인인원과 구직인원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음.
- 제조업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

<그림 10> 충남 제조업의 구인구직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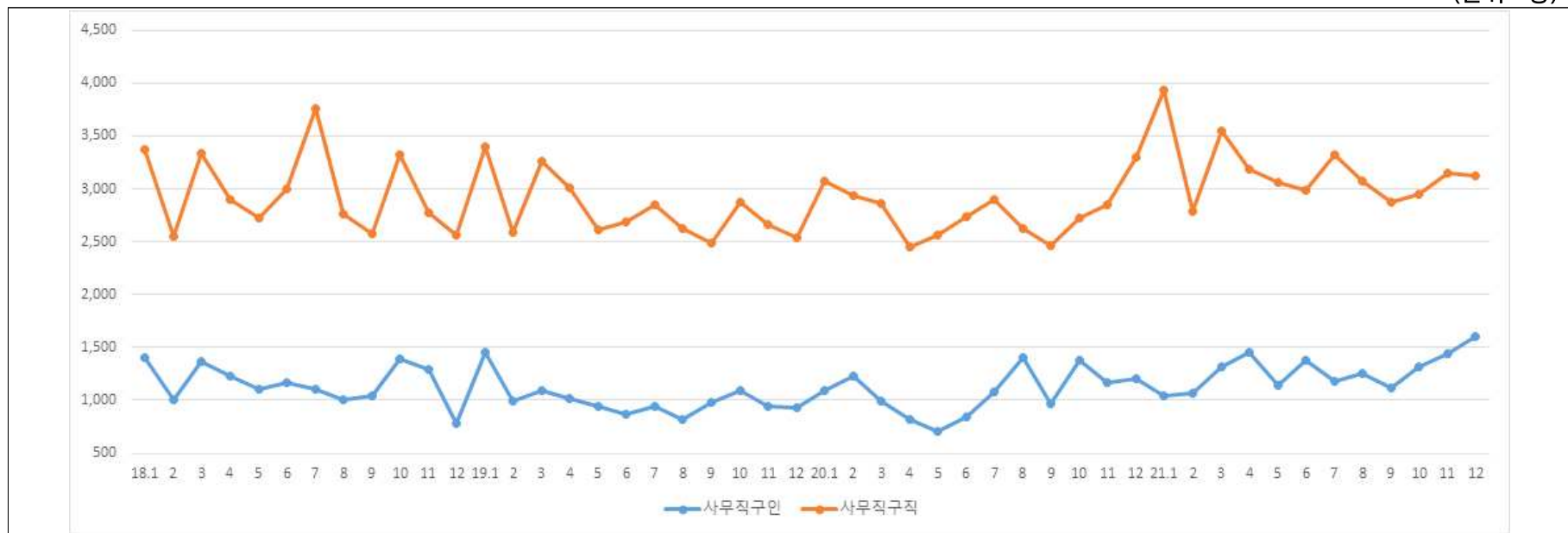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- 제조업 구인난에도 불구하고, 사무직은 구인인원보다 구직인원이 많아 구직난을 겪고 있음. 사무직 구인인원과 구직인원의 차이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사무직의 인력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.

<그림 11> 충남의 사무직 구인구직 추이('18년~'21년)

(단위: 명)



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, 각 월별

II 충남 일자리의 향후 전망과 대응

1. 충남 일자리의 향후 전망

■ 충격 이후에 강한 회복력

- 충남은 튼실한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,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강함
-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충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, 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함
- 따라서 일자리 위기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충남의 회복력으로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임

■ 충남 주력산업에서 안정적 일자리 제공

- 자동차산업이 주축하고 있긴 하나, 다른 철강, 반도체, 화학, 기계 등의 주력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 일자리 위기를 완충해 주고 있음

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취약계층 보호

- 코로나19 시기 광역, 시군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전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
- 다만 시군단위에서 가시적 일자리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, 이에 대한 정책 수요는 증가할 것임

■ 도소매·숙박·음식점업은 코로나19 이후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

-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고, 충남 역시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나타남
- 코로나19 이후에도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(서비스업 이탈 후 재진입 의도 낮음)

■ 노동시장 미스매칭 심화 (제조업 구인난, 사무직 구직난)

- 충남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력 확보가 중요하나, 충남의 고질적인 제조업 구인난은 더욱 심화될 것임
- 사무직 일자리가 제한적인 충남에서 사무직 취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, 사무직 일자리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임

■ 청년 고용률의 침체와 유출

- 청년의 제조업 기피현상, 삶의 질 중시 등으로 제조업으로 취업기피 경향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
- 충남지역 내 청년 선호 직업 및 일자리가 적기 때문에,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

2.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

■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난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

- 새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, 예산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
- 충남 시군 일자리 사업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핵심에 두고, 몇몇 소규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, 향후에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발굴·추진하는 것이 핵심되어야 할 것임
- 이를 위해 일자리 사업을 기획·실행·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이 중요해 질 것임

■ 제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

- 제조업 구인난 해소는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임에도, 충남의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임

- 제조업 구인난이 지속될 경우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,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직면
- 제조업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, 원하청 임금격차 완화, 실질 임금의 개선 등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

■ 제조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전통적 제조업(식품가공업, 금속가공 등), 중소제조업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
- R&D지원, ICT융합지원, 생산공정개선지원, 신제품개발 및 마케팅지원 등이 인프라에 포함되며, 산업단지 특성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

■ 산업구조 개편에 의한 노동전환 전략 마련

- 디지털전환, 탄소중립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은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이들 산업구조 개편에 밀접하게 연관된 충남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

- 다만, 산업구조 개편, 노동전환 등은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계획하고, 광역은 기초자치단체가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초-광역의 역할 분담 필요

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

- 충남은 지리적·교통적 특성, 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청년의 지속적인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임
- 청년 유출은 지방소멸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성장의 인적자원 확보를 어렵게 하여 지역의 낙후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
- 따라서 청년이 선호하는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, 지역의 주체로써 청년의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과 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

■ 노동시장 불확실성 심화에 대한 대응

-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, 고유가, 고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,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
- 충남은 몇몇 산업에 편중되고 의존성이 높아 ‘러스트벨트’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. 노동시장 불확실성 심화됨에 따라, 산업 및 고용위기 발생시 즉각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응 체계 및 대응 메뉴얼 마련 필요

■ 노동시장 주체들의 활발한 사회적 대화

- 지역의 일자리 및 노동시장 구조, 사회구조 등이 복잡해 지면서 지역 주체들의 대화가 강조될 것임. 특히 고용정책에 대한 지역의 재량권, 예산권 등이 확대되면서 지역단위의 일자리 및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시 될 것임
- 따라서 충남지역의 다양한 노동시장 주체들이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틀 마련이 필요함

- 산업구조 개편, 노동전환 등은 이해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사뿐 아니라 지역 사회 주체들에게도 중요한 이슈임. 따라서 지역 사회적 대화 틀에서의 논의를 통한 동의와 합의,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

감사합니다